Title. 수특 독서 사회·문화 **Data.**

· 사회·문화

in [수특]

→ 사회에서 일어나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소개·해결 방안

→ 법학·사회학·경영학·경제학·인류학·문화학 등

→ 특정 현상 제재 · 특징 주목

제도·정책 : 특징. 한계. 의의. 대안

견해·주장 : 구체적 사례에 적용

다양한 관점 비교·분석

→ 추론적 사고 관련 문항

비판적 읽기 관련 문항

→ 사회·문화는 제시된 개념의 특징 파악

(<보기>)
특정 상황에서의 적용 이 결합한 형태이다.

· 사회·문화 01

[채권] : 만기·액면가로 채권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 알 수 있음.

[할인채] : ① 액면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발행 ② 만기에 액면가를 지급받음.

가격 → 액면가의 현재 가치와 같음.

→ 미래의 특정 금액을 일정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 시점 가치

→ 채권의 만기 수익률은 시장 금리와 같아짐.

(만기가 다른 경우)

[장·단기 수익률 격차] → 수익률 곡선 (일반적으로 만기가 길수록 만기 수익률 증가. 기울기 +)

<기울기> (장기 수익률 − 단기 수익률) in 2년 만기 채권 ✗ 1년 만기 채권 2년 연속

· 2년 채권 수익률 A · 첫 1년 수익률 B, 다음 해 B'

<수익> → 이득보는 정도. 얻는 비용 − 사는 비용

(1+A)(1+A) = (1+B)(1+B') (why? 수익이 다르면 수익 높은 쪽에 수요 몰려 가격 변동)

(A.B : 관측 가능, B' : 기대치)

① B' > B : 1년 단위로 사는 게 이득. → 1년 단위 채권 가격 오름 → 단기 채권 수익률↓ → 수익률 곡선 기울기 (+)

② B > B' : 1년 단위로 사는 게 손해 → 1년 단위 채권 가격 하락 → 단기 채권 수익률↑ → 수익률 곡선 기울기 (−)

→ 장기 채권일수록 만기 수익률이 금리 변화에 민감함.

Title. Data.

• 사회·문화 02

연금 : 은퇴 후 사망 시까지 매달 일정액 수령

[1] 공적 연금제도 : 소비 평준화 (생애 소득 배분)

ex) 국민연금제도 → 경제 활동 시 일정액 납부, 은퇴 후 사망까지 매달 일정액 수령

→ 10년 이상 가입해야 함. 수령액 : 기본 연금 × 지급률 (10년 60% + 1년당 5%)

기본연금 : (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) + (개인 소득 평균) / 2

→ ① 부양가족 : 일정 연금액 + ② 수급권자 사망 : 연금 일정 비율 유족이 수령 → 가입자들 간 소득 재분배

[2] 사적 연금 제도 : 노후의 보충적 소득 보장

ex) 연금저축제도 → 최소 5년 이상 납부 후 만 55세부터 일정 기간 연금으로.

→ 일반 예적금보다 낮은 세금. 근로자는 납입금액 일정비율 세금 감면

→ 55세 이전 중도해지 시 ① 납입금액 연금으로 못받음 ② 예외 상황 말고는 감면 세금 반환 (why? 노후 지원이 목적이니까)

[3] 기초 연금 제도 : 경제 활동 기간 짧거나 없는이들을 위해.

1> 사회 수당형 → 연령·거주요건 충족 시 지급

→ 사각지대 제거. But 효율↓ 막대한 예산 (공적 지원 불가)

2> 최저소득보장형 → 연금 포함 소득·자산으로 소득 인정액 산출

→ 최저소득에 소득 인정액이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 지원

→ 재정효율성↑ (노인만 대상) But 행정 비용↑, 근로의복 저해

3> 최저보장 연금형 → 연금 수령 기준액보다 적은 연금 수령 시 부족분 보충

→ 행정효율성↑. But 공적 연금이 충분히 성숙한 상태에서 도입.

→ ① 형평성 문제 ② 취약 계층 저축 유인 저해

in 대한민국 → 만 65세 이상 중 소득액이 최저 소득 이하인 사람만 (최저 소득 보장형)

→ 기초연금 + 국민연금이 일정 이상이면 기초연금 감액 (최저 보장 연금형)

→ 최저 소득 금액은 부부일 때 더 크고

군인·공무원 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기초 연금 수급대상 제외

Title. Data.

∘ 사회·문화 03

환위험 : 환율 변동으로 기업 가치가 변화할 가능성 (이익·손해)

↳ 환율위험 × 환 노출

환 노출 : 1> | 외화로 표시된 자산 − 외화로 표시된 부채 | 2> | 외화로 표시된 현금 유입 예상액 − 외화로 표시된 현금 유출 예상액 |

개별 기업이 통제 가능한 요인

환위험 관리 기법 : 헤지 기법. 경영 상 불확실성 제거 목적.

↓

거래 노출 : 외화 표시 거래의 청산 과정에서 환율 변동으로 환이익 /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는 정도

↳ 1> 내부적 관리 기법 2> 외부적 관리 기법

내부적 관리 기법

① 네팅 : 채권, 채무 관계를 개별 결제 X. 일정 기간 경과 후 상쇄하고 난 차액은 결제

다자간 네팅의 경우 그룹 내 중앙결제센터가 순차액을 통보

불필요한 손해를 줄임 (노출 금액 ↓) but 결제 시점 늦어짐 or 거래·결제시 통화 종류 변화

② 매칭 : 외화 자금의 유입과 유출을 통화별·만기별로 일치

제3자 간 거래에도 적용 적용

유입·유출 시점이 어긋나면 거래 노출 발생

외부적 관리 기법

① 선물환 헤지 : 선도 환율 (거래일에 미리 정해놓은 환율)로 미래의 만기일에 인수·인도

환위험을 완전히 제거 but 이익의 가능성도 제거 (환위험의 정의)

② 통화 옵션 헤지 : 외화를 미리 약정된 행사 가격으로 만기일 or 그 전에 매입·매도할 수 있는 권리

1> 콜옵션 (매입 청구권) 2> 풋옵션 (매도 청구권)

↳ 옵션 매입자가 실행 여부 선택 가능. (유리하게만 쓰는 게 가능)

대가 "옵션 프리미엄"

Title. **Data.**

• 사회·문화 04

정책 :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수단 → **정책 결정** : 미래 지향적. who? ① 엘리트론 (소수의 엘리트) ② 다원주의 (여러 집단)

→ **신엘리트론** : 사회는 소수의 지배 엘리트 + 일반 시민

지배 엘리트는 폐쇄적, 보수적 성격 → 정책은 점진적
정책 결정 독점적 주도. 안정지향적

↓

무의사 결정론 : 무의사 결정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만 의제로 통과시키는 것

+ 정책의 범위나 내용을 수정·축소 (정책 결정 과정)
예산 감축·집행자 매수 (정책 집행 과정)
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 유도 (정책 평가·환류 과정)

수단 →
- ① 폭력 행사 (강제 저지)
- ② 권력 행사 (의제 채택 방지)
- ③ 지배적 가치·규범 및 신념 이용 (~를 침해하니 안돼.)
- ④ 절차 수정·강화

확인 →
- ① 핵심 쟁점 선정 : 가치·자원의 분배에 도전하는 쟁점
- ② 영향력에 대한 기대의 정당화 : 기존 질서에 도전 or 피해와 연관된 집단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가?
- ③ 방지 권력 체계의 증명 : 영향력 행사를 좌절시킨 것 증명

정책 지연 사유로 정당화 되지 않는 정책 지연, 설명

• 사회·문화 05

임대차 계약 : 임차인(빌리는) 임대인(빌려주는) 임차물(대상) 차임(사용료)

주택인 경우 보통 보증금 (- 연체차임, 관리비). 계약 자유의 원칙 (당사자들끼리~)

↓

주택임대차 보호법 → 주택 대상. (보증금 액수 무관. but 일시 사용은 제외)

→ ① 최단 존속기간 (2년) : 2년 미만 약정 or 약정X
이 기간 경과 전까지는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주장 불가
(지정기간안 성립! 기간 만료 전 임대차 종료하려면 손해배상 필요)

→ ② 갱신 요구권 (1회만) : 갱신 (같은 내용으로~) → 법정갱신 (임대차 종료 전 2~6개월 사이 거절통지X)
갱신 요구권 (임차인의 일방적 갱신) → ① 연체 월세 2달分
→ ② 직계 가족 or 임대인이 산 경우 → 아닐 시 손해 청구가능 (제외!)

↓

in 점포 .. 대부분은 주택과 동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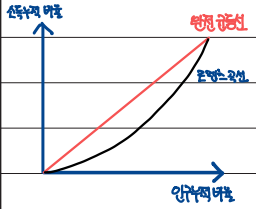
but
- ① 갱신은 임대 종료전 1~6개월
- ② 최단존속기간이 적용되더라도 1년. 대규모 점포는 보장X.
- ③ 갱신 요구권은 최초 계약기간 포함 10년 초과 전까지 여러번 가능

Title. Data.

• 사회·문화 06

소득 불평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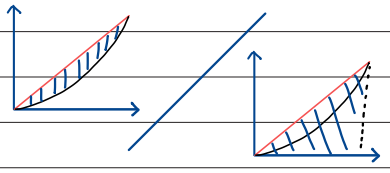
로렌츠 곡선 (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)



완전균등선 : 모든 사람의 소득 균등

로렌츠곡선 : 소득 불균등. 멀어질수록 심함.

→ **지니 계수**



= 0부터 1까지의 숫자

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심각

소득 점유율 (전체 인구 소득 총액에서 각 집단의 인구 소득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)

몫위 : 소득을 차례대로 정리해 동일 규모로 나눈 각 집단

① 10몫위 : $\frac{\text{하위 40\% 소득총액}}{\text{전체 인구 소득총액}} \Big/ \frac{\text{상위 20\% 소득총액}}{\text{전체인구 소득 총액}} = \frac{\text{하위 40\% 총액}}{\text{상위 20\% 총액}} = \frac{\text{하위 40\% 소득점유율}}{\text{상위 20\% 소득점유율}} \leq 2$ (클수록 균등)

② 5몫위 : $\frac{\text{상위 20\% 점유율}}{\text{하위 20\% 점유율}}$ (클수록 불균등)

Q. 왜 저 비율들로 나누나요?

팔마 비 : 상위 11~60%는 소득 점유율이 안정됨.

나머지에서 문제 당생.

팔마 비율 : $\frac{\text{상위 10\% 점유율}}{\text{하위 40\% 점유율}}$

Title. Data.

• 사회·문화 07

관세 : 국가 재정 수입원. 조세 법률주의 적용

but 신속 대처 · 외국 협정 제약을 받음

<일반>

① 종가세 : 가격을 과세 표준. 가격 × 과세율

② 종량세 : 수량을 과세 표준.

→ 둘 중 하나만을 선택관세 / 둘 다 하면 복합관세

<복합>

① 슬라이드 관세 : 수입 가격이 낮으면 높은 세율 / 높으면 낮은 세율 → 국내산업보호

② 할당 관세 : 일정수량 까지는 낮은 관세율 (1차) / 초과하면 높은 관세율 (2차)

→ 관세 할당수량. 국내 수요량 - 국내 공급량

<특수>

① 긴급 관세 : 신속하게 관세율 조정

1> 수입품 가격 급격히 하락하는데 그 상품 수입은 증가

2> 타국 상품 수입 증가로 국내 산업 중대 피해 우려

→ 무역량. 국내·세계 경제 국가 간 협력·갈등 관계에 중요한 역할

• 사회·문화 08

투표 : 한계 why → 심의에 의한 의사 결정!

심의 ① 내적 심의 : 결정 전 심사숙고

↓ 점진 확장

② 외적 심의 : 의견 교환을 통해 최선에 도달하려는 집합적 숙고

강조

심의 민주주의자 : 결국 투표하게 되더라도 심의는 민주적 정당성을 높임.

why? ① 정보를 모으는 과정. 합리적 의사 결정 가능성↑

② 개인 판단 능력 한계 극복

③ 공적·도덕적 의사 결정 도출

④ 관점을 공개시켜 공적 관점에 의한 의사결정

⑤ 순응비용 (정책에 불만한 ㅇ) 절감

→ 사회규모 때문에 보편화 못함

피시킨 : 공론 조사!

(why? 사람은 관련 없으면 관심이 없음 (합리적 무지) → 물어와도 효용 X

\+ 아는 척. 확증 편향. 가용성 편향)

공론조사 : 표본추출 + 학습과 토론을 통한 숙의

① 숙의 안한 다수 대상 1차 조사

② 편중되지 않게 대상자 선정

③ 심의 주체에게 정보 제공

④ 동일한 조사 (견해 변화 확인)

⑤ 언론 발표를 통해 효력

비판 ① 공론조사 결과가 최종결과는 X. 의사결정 지연될 뿐.

② 결과가 취사선택될 수 있음

③ 다양한 요소로 인해 다양성 제거 + 심의의 질이 떨어질 수 있음

Title. **Data.**

• 사회·문화 09

[스케일] : 지리적 상상의 구성 요소.

↓

① [지도학적 스케일] : 대상의 특성을 크기로 드러내기 위한 양적 측정 단위
양적 측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특정 단위로 나눠 측정.

② [위계적 스케일] : 질적이고 수직적인 범위.

} 한 현상을 여러 스케일로 분류해 관찰·측정

Q. 스케일은 실존하는가?

A1. [구조주의적 관점] : 사회·물질적 현상은 대상보다 위에 있는 예측 가능한 규칙성에 따라 구조화.
(테일러) → 스케일에 의해 시스템이, 시스템에 의해 구조화.

A2. 스케일은 서로 다른 순간들과 맥락의 산물이다.
[포스트 구조주의] → 스케일은 특정한 사회·공간적 관계와 질서화에 대한 관념적 재현물임.
∴ 선험적 의미, 실재 X.

→ 실재하든 아니든 스케일은 사회적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끼치는 지리적 상상임.

[스케일로 조직화된 지리적 상상] → ①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 ② 실세계에서 실질적 영향

↓

사회 지리학은
1> 상이한 스케일에서 사람 간 관계·상호작용에 주목
2> 스케일 개념을 통해 국제·사회적 변화를 특정 입지나 장소에 위치시키고
3> 그 입지·장소에 대한 우리의 지식도 변화 시키고자 함.

• 사회·문화 10

[법익] :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(국가가 보호할 의무 O)

[법익 침해 행위] → 범죄로 규정·형벌부과 (공권력에 의한 범죄자 법익 제한)

요건
→ ① 법익 제한 사유·구체적 내용이 제정된 법률로 미리 규정
② 비례 원칙 (국민의 법익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제한)

형벌을 부과하려면..
[죄형 법정주의] : 형벌 부과를 위해 구성 요건 (범죄 내용)과 이에 따른 형벌의 구체적 내용이 법률로 규정돼 있어야 함.

[비례 원칙] :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 부과
1> 법익 침해가 클수록 무겁게
2> 비도덕적이라는 지만으로 처벌 X
3> 형벌로 대응할 필요 없으면 범죄로 규정 X
4> 법익 침해를 초래하지 않았어도 그런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크면 범죄 규정 가능
→ 결과가 ① 발생 안해도 성립 위험범 ② 발생해야만 침해범

[미수범] : 실행 착수 인정 but 행위 완성 X 완성하면 [기수범]. 기수범만 처벌하는 게 원칙

Q. 미수범 처벌하려면?

A. 법률 + 구성 요건에 따라 미수범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것 정당화 (중요한 법익은 더 강하게 보호.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위험범도 미수범 처벌 가능)

→ ① 장애미수 : 외부적 사정으로 미수. 형 감경 가능
② 중지미수 : 자발적으로 범죄 행위 중단해 미수. 반드시 감경 or 면제 (보상 차원)
③ 불능미수 : 나름대로 범죄 함 but 착각으로 범죄 완성 못함. 감경 가능, 면제도 가능.

Title. Data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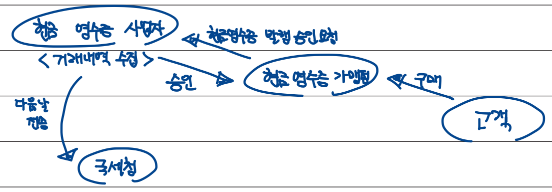
• 사회·문화 11

(신용카드 : 신용 담보 체크카드 : 예금계좌) → 명시된 명의자가 사용하는 것이 원칙. ∴ 세원 양성화 용이

현금 : 기존 제도로는 세원 양성화 어려움.

↓

현금영수증 제도 :



이후 국세청 : 거래 내역과 신고된 세금자료 비교

의무 발행 업종은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에서 무조건 영수증 발급.

안 하면 1> 미발급 금액 50% 과태료

2> 미발급금액 20% 가산세 부과

/ 영수증 발급받은 구매자가 ① 근로 소득자 or ② 근로 소득자의 부양 가족 이면

일정 한도까지는 영수증 발급액이 많을수록 공제액 ↑

현금 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발급해줘야 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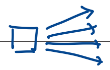
• 사회·문화 12

택배 : 접수 → 출발지 영업소 화물 수거 → 터미널로 화물 운송 → 간선 운송, 도착지 터미널로 이동 → 도착지 영업소 → 도착

↳ 수요 공간적 분포 · 예상 업무량 · 고려

택배 네트워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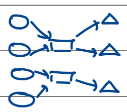
[1] P2P : 출발지에서 바로 도착지 터미널로 운송.



1> 운송시간 단축 2> 작업 시간 증가 방지 (물량 분산) / 3> 간선운송비용 ↑ 4> 많은 운영 인력 5> 개별 터미널 투자 비용 ↑

6> 물동량 불균형 시 간선운송 효율 ↓

[2] H&S : 상위 (허브) 터미널과 하위 (서브) 터미널로 분류



출발지 터미널 모든 화물을 허브로, 허브에서 분류해 도착지 터미널로 운송

1> 전체적 분류비용 · 작업비용 ↓ 2> 물동량 불균형 완화 / 3> 화물 이동 시간 증가 가능 4> 화물 분류 시간 ↓ 도착 지연 가능성 ↑

5> 분류과정 오류 가능성 ↑ 6> 간선 운송 지연 시 허브 작업 생산성 ↓

7> 성수기 택배물량 > 허브 처리 용량 이면 전체 네트워크 붕괴 가능성

[3] 하이브리드 : P2P + H&S 그때그때 맞춰 수행. 기준은 터미널 간 물동량

1> 대응이 쉬움 / 2> 전체적인 분류 비용 상승 가능

Title.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Data.

• 사회·문화 13

채권 ⊃ 금전채권 : 금전 지급 요구 가능. / 지급기일(정해진 날 or 청구한 날)까지 못 주면 채무불이행

→ 강제 집행 : 법원에 채권자가 신청. 채무자가 반대해도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 주도 하 진행

<대상이 부동산>

경매 절차 : ① 금전 채권자 라는 것 · 채권액 · 기일까지 갚지 못한 것을

확정 판결로 공적 확인

② 채권자가 목적물 특정, 경매 신청

↓ 개시

압류 : 현상 유지를 위한 조치. 등기부에 압류 등기 기록

↓

매각 : 최고가 제시한 사람인 매수인 선정.

제시액을 납부하면 채무자의 소유권 · 소유 전제로 발생한 권리 자동소멸

배당 절차 : 공제후 남은 배당 가능 금액을 분배.

→ 안분 배당 :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분 해야 함.

예외

↓

담보 물권 : 우선 변제권 (내 채권액 전부 받을 수 있는)을 가짐.

등기부를 통해 공시 → 채무자가 목적물 처분해도 유지됨.

일반 채권자 : 가 압 류 가능.

↓

등기 공시

가압류 이후에도 목적물 처분은 가능하지만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도 강제집행 부동산임을 주장 가능

but 안분 배당을 받음

<시점>

가압류 가 담보 물권 보다 빠르면 우선 변제권 주장 불가.

∴ 담보 물권은 ① 일반(그냥) 채권자 ② 본인보다 나중에 가압류 등기한 사람

에게 우선 변제권 주장 가능.